10.18219/ddmh..113.202103.135

신간회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
—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산을 중심으로

崔洙逸*

Ⅰ. 문제제기
Ⅱ. 『개벽』 60호, 발화의 성격과 의미 맥락
Ⅲ. 민족협동전선론의 확산과 그 반향: 『개벽』의 정간과 폐간
Ⅳ. 남은 문제와 그 실마리

•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 대중결사였던 신간회의 결성 과정에 끼친 『개벽』의 영향력을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신간회 결성의 기조가 되었던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미디어 『개벽』이 기여한 바를 추론하였고, 민족협동전선체(신간회)의 前史라는 차원에서 『개벽』(개벽사)을 그 롤모델로 의미화하려 했으며, 조직 구성의 차원에서 신간회에 새겨진 『개벽』의 흔적을 추적하는 방법들을 모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천명(1925.6)과 『개벽』의 폐간(1926.8) 그리고 신간회의 결성(1927.2)을 상호연관성 위에서 살피되, 『개벽』의 '미디어성'에 의거해 그 연속된 과정에 여론-미디어적 의상(옷)을 입혀보려 하였다. 이는 기존의 '신간회 연구'가 보인 조직운동 중심이라는 치우침을 보완하고, '『개벽』 연구' 혹은 '천도교 연구'가 돌보지 못한 『개벽』의 미디어적 자율성을 보살핀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신간회의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은 담론의 차원과 조직구성의 차원 모두를 포괄하는 사안이지만, 이 글에서는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산이라는 전자의

* 성균관대학교 강사

차원에 논의의 무게중심을 두었다. 다만, 『개벽』의 유통 관련 인물들의 상당수가 신간회 지방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또 '개벽사 확장기성회'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의 방향적 실마리를 남겨놓았다.

주제어 : 『개벽』, 신간회, 민족협동전선론, 천도교, 천도교 新派, 천도교 舊派, 사회주의, 민족주의, 좌우합작, 대중운동, 대중조직, 합법단체, 6 · 10만세운동, 미디어의 자율성

Ⅰ. 문제제기

두 대상이 있다. 하나는 시대의 寵兒로서 지식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잡지 『개벽』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결사단체였던 신간회이다. 그런데 『개벽』이 구축한 전국적 규모의 유통망(52지사-62분사)과 신간회의 전국적 조직망(140여 개 지회)이 人的으로 겹친다. 간단한 샘플링에도 60여 명이 확인되었다.[1)]

『개벽』 지분사원이자 신간회 회원인 60여 명의 명단
강훈(상주) 강기덕(원산) 강석봉(전남) 강성호(통영) 강영균(신고산) 강창보(제주) 강휘생(사천) 계행노(선천) 곽상훈(인천) 김규환(장성) 김달영(안변) 김문준(제주) 김상겸(선천) 김상설(선천) 김상익(원산) 김성진(병영) 김세진(해남) 김영갑(영천) 김완섭(대구) 김용환(마산) 김윤환(신의주) 김재진(강릉) 김종건(부산) 김진국(제천) 김택수(제주) 김형근(개성) 김홍두(군산) 김홍선(전남) 명도석(마산) 박세혁(군산) 박태화(전주) 백인옥(강계) 서학태(대구) 송종현(제주) 신태순(당진) 신학균(영암) 오상근(관동) 오언영(충주) 유창식(병영) 윤택근(거제) 이가순(원산) 이군오(선천) 이동수(횡성) 이명섭(영흥) 이선규(충주) 이수을(함남) 이윤식(강릉) 이의달(선천) 이종린(고원) 이주근(거제) 이진추(곽산) 이창식(곽산) 이풍구(대구) 이형재(마산) 임용길(부산) 장기욱(원산) 장순기(전남) 전영률(군산) 정복기(나주) 조봉희(영흥) 최윤옥(평양) 최철용(마산) 하규항(개성) 한길상(전남) 홍종휘(장성)

『개벽』이 강제폐간된 것이 1926년 8월이요, 신간회가 결성된 것이 1927년 2월이니, 이는 『개벽』의 유통 담당자들이 6개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신간회의 지역조직원으로 재등장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것을 유의미한 어떤 것으로 '특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식민지 지식분자의 대다수가 사실상 신간회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로 귀속시킬지의 여부였다. 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는 '특화'로 방향을 가다듬었다. 특화의 방향은 '미디어, 여론의 영향력'이었다. 『개벽』(개벽사)이 신간회의 근간이 되었던 청년 · 사회단체들과 달리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미디어'이자 '언론

1) 이는 「『개벽』 유통 관련 인물 편람」(『『개벽』 연구』, 소명, 2008)과 기존 신간회 지회 연구(이균영, 성주현, 김영진, 장승순, 김남석 등)에 거론된 인물을 비교한 결과이다. 괄호( ) 안의 지역은 『개벽』 지사의 위치를 드러낸 것이지, 신간회 지회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개벽』 유통 관련 인물들 중에 '신간회 회원'이었던 사람들을 일별하여 제시한 것이지, 신간회 지회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분석의 결과물은 아니다.

기관'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신간회가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정치조직으로서 '여론'의 자장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양자 관련성의 토대가 되었고, 신간회 탄생의 담론적 기초였던 '민족협동전선론'을 '시대의 寵兒'였던 『개벽』이 대중 앞에 설파했다는 점이 직접적인 접점이 되었다. 요컨대 민족협동전선론이 대중 앞에 천명되고, 그 지평 위에 신간회가 '합법적 · 공개적 · 대중적'으로 조직된 이상, 그 추이와 경과는 미디어-여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고, 그에 따라 『개벽』과 민족협동전선론 나아가 『개벽』과 신간회는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상관성을 띤다는 것이다.[2)]

따라서 『개벽』의 '미디어성'[3)]은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천명(1925.6)과 『개벽』의 폐간 그리고 신간회의 결성을 인과적으로 연결짓는 방법적 고리이자, 그 일련의 과정에 '여론-미디어적' 衣裳을 입히는 서술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개벽』의 미디어성을 새삼 부각하는 까닭은 관련 부문 연구가 이 문제를 주목하기 어려웠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신간회 연구'는 미디어의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신간회가 조직체이고 조직운동의 결과물인 이상, 그 결성과 활동 그리고 해소를 둘러싼 각종 사상 · 운동 단체들의 조직적 움직임과 활동 내역을 복구하는 작업이 연구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4)] 물론,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 『동아

---

2) '민족협동전선론'은 연원이 깊고, 그 내포 또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실재였다. 이 글은 그것이 『개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담론 운동으로 떠오르는 국면을 의미화하다 보니, 그 복잡성과 다층성을 드러내 보이기 어려웠다. 즉, '좌우연합'이라는 대전제 내지 보편적 아우라에 방점이 놓였기 때문에 '민족협동전선론' 내부의 낙차와 변별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 가령, 천도교 구파와 신파는 '민족협동전선'의 실현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문제 삼기보다 '좌우합작'이라는 큰 '흐름' 내지 '대세'를 가시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이 훗날 노선을 달리하는 개인과 단체의 신간회 참여나 천도교 신파의 신간회 참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3) '미디어성'의 핵심은 하나의 미디어가 독자 대중과 항상적인 소통을 통해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역학 위에서 상대적인 자립성(주도 세력의 일률적 담론이나 지배에 대해)과 역동성을 띨 수 있다는 생각을 담아낸 개념이다. 즉, 일반적인 조직 운동체도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강령과 담론을 보완, 수정하지만, 미디어는 하나의 상품인 데다가 대중과의 접점도 훨씬 전면적이고, 또 그 내적 역학도 복잡하여 주도 세력의 일률적 지배가 관철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천도교 교단을 장악한 신파의 담론이 『개벽』을 전일적으로 지배하지 못했고, 『개벽』이 1920년대 초중반의 조선사회의 방향전환을 주도했다는 점은 그 가능성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개벽』의 역동성은 그 '미디어성'의 주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4) 단행본 연구서가 이미 여러 권이고, 학위논문과 개별 연구 논문이 백여 편을 훌쩍 넘겨 축적되어

일보』, 『개벽』을 비롯한 언론 · 미디어가 언급되었다. 『조선일보』가 "신간회의 대변지 혹은 기관지"[5]로 공인되었고, 『개벽』이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발화지 중 하나였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6] 하지만 그 또한 무게중심이 조직(운동)에 있었지 '미디어성'과 여론이라는 차원에 놓인 것은 아니었다. 『조선일보』의 "신간회 기사일속"은 조직운동의 경과보고라는 해석 틀 안에 갇혔고, 『개벽』은 주로 협동전선을 둘러싼 천도교단의 조직적 움직임을 부연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7]

기존의 '신간회 연구'가 여론-미디어적 차원에 주목하기 어려웠던 데에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했을 법하다. 신간회가 "비타협주의와 기회주의의 배격을 표방했지만, 그 형식은 일제의 승인을 받는 합법적 (대중-인용자)운동단체"[8]였기 때문이다. 눈앞의 적과 싸우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데, 그 적에게 단체의 명칭에서 강령까지 모두 조율당해야 하는 상황의 곤욕감은 본의 아니게 '합법, 공개, 대중'이라는 키워드가 내포한 가능성과 긍정성을 일단 무너뜨리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신간회 강령을 앞에 두고 그 '부족함, 불철저함, 불완전함, 선명하지 못함'에 아쉬워하기보다 그 너머의 가능성을 먼저 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산이라는 여론-미디어적 맥락은 '합법, 공개, 대중'이라는 디딤돌을 밟아 상상될 수 있는 지평인데, 이 디딤돌 자체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기 어려운 형국이었다는 것이다.

있는 '신간회' 연구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신간회 결성 국면에 작용한 여론 · 미디어의 역할을 부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무례를 범했다.

5)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233면; 임경석, 「식민지시대 민족통일전선운동사 연구의 궤적-이균영의 『신간회 연구』(역사비평사, 1993)에 대한 비평」, 『한국사연구』 149, 한국사연구회, 2010, 390면 등.

6) 이균영, 앞의 책, 43면 참조.

7) 이 점에서 윤효정의 「조선일보의 중국 국공합작 지지 담론과 신간회 창립 지원」(『역사연구』 34, 역사학연구소, 2018)은 필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1926년말에서 1927년 시기 조선일보의 중국국민혁명 담론의 내용과 역할을 검토"한 이 글의 입각점이 미디어-여론을 통한 민족협동전선론의 확산과 신간회 창립 지원이기 때문이다. 이균영의 『신간회 연구』가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발화라는 차원에서 『개벽』을 새삼 주목하게 만든 계기였다면, 윤호정의 연구는 『개벽』의 발화가 가져온 파장과 영향력을 되새김하게 만든 방향적 계기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8)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114면 참조.

따라서 “합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법적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곧 일제와 타협하는 것은 아니라는”[9] 윤덕영의 지적에 유념하면서, ‘합법, 공개, 대중’에 대한 보편적이고 심정적인 독법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합법적 대중운동의 가능성과 거기에 작용한 언론-미디어들의 힘과 역할이 적극적으로 탐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렇다면 ‘『개벽』 연구’와 ‘천도교 연구’는 어떠했을까.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조직운동에 대한 연구가 본원적으로 지침과 강령의 문밖을 소요하며 고뇌하는 개인을 상상할 수 없듯, 천도교 연구는 교단 조직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미디어(『개벽』)를 상상하기 어려웠다.[11] 실제로 『개벽』은 천도교 연구사에서 지속적으로 천도교단의 조직 변천 양상과 논리를 설명하는 도구로만 차출되었으니, 천도교단과 미디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은 요원한 것이었다.[12] 『개벽』은 종교의 벽을 넘어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디어인데, 천도교 연구는 자꾸만 『개벽』을 천도교 종교운동의 틀 안으로 수렴하려고 애쓰는 모순된 형국이었다. 따라서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산, 그리고 신간회의 결성 국면에 끼친 『개벽』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복기하고 의미화하기 위해서는 『개벽』의 미디어적 자율성에 주목할

9) 앞의 논문, 114면 참조.

10)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게재한 『개벽』의 과거와 잇대어 볼 때,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발화가 모순된 것이고, 또 이것을 미디어의 상업주의(독자확보전략)로 바라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심사위원 선생님의 지적이 있었다. 자본으로서의 미디어를 살피는 데 상업주의란 피해갈 수 없는 점검 항목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역동적인 『개벽』의 역사를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한편으로는 검열을 마주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독자들(여론)을 상대해야 했던 미디어의 상업주의란 그것들과의 긴장 관계에 의해 조율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0회 이상의 압수가 상징하는 『개벽』 검열의 역사와 그 방향 전화(사회주의의 수용)를 염두에 둘 때, 「민족개조론」 사건의 여파는 여론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던 미디어의 존재 양태, 그 역동성을 드러내는 표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1) 미디어에 대한 자본(가)의 전일적 지배가 당연시되는 오늘날, 지배 조직의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디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긴장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현대 언론의 미래적 소명이라고 할 때, 『개벽』의 상대적 자율성과 그 역동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개벽』의 현재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12) ‘『개벽』 연구’ 또한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오랜 기간 『개벽』이 천도교 기관지 혹은 準기관지라는 평가가 통설로 굳어져 왔던 만큼, 천도교 교단의 조직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벽』의 자율성과 역동성은 조망되기 어려웠다. 최수일의 『『개벽』 연구』(소명출판, 2008)는 이러한 기존의 통설에 대한 문제제기에 비롯된 연구였다.

필요가 있다. 『개벽』이 천도교단의 조직운동의 산물이고, 천도교의 後光 속에 성장한 미디어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교단 조직의 논리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場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천도교단의 조직적 분화 과정[13]과 추이에 방점을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천도교단과 사회주의 세력의 합종연횡으로 '신간회'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의 공통적 문제점이 종교(조직)와 미디어의 동일시 혹은 『개벽』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무관심이기 때문이며,[14] 그러한 동일시가 『개벽』의 실상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천도교단의 1, 2차 분규 과정을 통해 교단을 장악한 것은 新派였고, 『개벽』 편집진의 대다수도 사실상 신파였다. 신파의 궁극적 목표는 '천도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였으니,[15] 본원적으로 배타성과 폐쇄성을 담지한 전략이었다. 그에 반해, 『개벽』은 종교의 벽을 넘어서고자 했던 잡지였고, 이런 '개방성'이야말로 『개벽』(사)이 식민지시대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역동적 미디어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1920년대 교단을 장악한 신파의 지도부는 줄기차게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행보를 노정했지만, 그 자장 안에 탄생한 『개벽』의 행보는 그에 종속되지 않았다.[16] 만약 『개벽』이 교권을 장악한 세력의 당리당략이나 지침에 좌우됐다면, 훗날 "범인간적 민족운동의 성과를 재래하는 유일한 기관"[17]임을 천명하고, 스스로의 역사를 "귀중한 경험과 고귀한 희생"[18]으로 함축하는 국면을 맞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19]

---

13) 1920년대 초반 혁신파와 보수파의 분화, 1925년 신파와 구파의 분화 과정을 가리킨다. 결국 교권을 장악한 것은 신파였다. 그 과정의 구체적 세부 맥락에 대해서는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장을 참조할 것.

14) 천도교단 분화 과정에 방점을 두고 '신간회의 결성'과 활동을 복원하려는 대다수의 시도들은 '신파'가 장악한 교단 상황이나 신파의 정치담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개벽』의 정치담론 사이의 실체적 낙차에 주목하지 않거나 사안 자체를 회피한다. 『개벽』에 미디어로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투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5) 김정인은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분화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천도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신파'의 정치적 목표로 꼽았다.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3장 참조.

16) 천도교 신파의 정치담론이나 정세분석이 실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신파의 담론으로 전일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호 긴장, 대립적인 다채로운 담론들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17) 「개벽사 사우제의 설행에 관한 취지와 규정」, 『개벽』 29호, 1922.11, 목차 뒷면.

18) 이는 『개벽』 28호 「권두언」의 제목이다. 지난 2년간의 『개벽』의 역사를 그렇게 정의했다. 동년 9월 12일부로 정치 · 시사의 게재가 허락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 자부심과 포부가 당차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자가당착 위에 진행된 천도교단 중심의 신간회 연구가 되레 『개벽』의 영향력을 가리거나 위축시키는 데로 귀착된다는 사실이다. 교단의 분화과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연구는 필연적으로 소수파였던 舊派와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 과정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되고,[20] 이는 필연적으로 신간회 조직에 관여한 신 · 구파의 참여 정도를 비교하는 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21] 하지만 민족협동전선과 '신간회'의 문제, 즉 천도교와 사회주의의 관계는 훨씬 폭넓고 다채로운 층위를 담지한 사안이다. 결코 신파[22] 혹은 구파와의 관계라는 테두리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보다 『개벽』이 '민족협동전선론'의 형성과 전파 그리고 그것이 범민족적 신뢰와 확신을 얻는 데 끼친 영향력과 파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몇몇 연구가 제시하는 숫자나 명단으로 환원될 수 있는 크기나 무게가 결코 아닌 것이다.

미디어의 상대적 자율성 확보란 『개벽』이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산, 나아가 '신간회'의 결성에 끼친 영향을 객관화하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그것이 저절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민족협동전선론'의 현실적 바탕이 되었던 『개벽』의

---

19) 신파의 논리든 구파의 논리든 『개벽』을 근거삼아 이루어지는 모든 재구성은 자기목적성에 지배되어 자료를 뽑아오게 돼 있으니 본의 아니게 『개벽』의 실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항존한다고 봐야 한다.

20) 임경석은 이균영의 『신간회 연구』에 대해 평가하면서, 민족주의 우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신간회 참여에 대한 연구들에 비추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으로 신간회가 탄생했다는 논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임경석, 「식민지시대 민족통일전선운동사 연구의 궤적-이균영의 『신간회 연구』(역사비평사, 1993)에 대한 비평」, 『한국사연구』 149, 한국사연구회, 2010).

21) 성주현의 논의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실증의 차원에서 천도교 신구파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 양상을 재구성한다는 취지와 그 성과를 부정할 수 없지만, 천도교가 종교의 틀을 넘어서서 식민지 민족운동에 끼친 영향력의 아우라를 바탕에 깔거나 지향점으로 삼기는 어려웠던 듯하다. 대부분의 천도교측 연구가 그렇듯, 『개벽』이 활용되지만 결과적으로 『개벽』을 '종교' 혹은 종교운동의 테두리 안에 가두게 됨으로써 천도교가 민족운동에 끼친 파장과 영향력을 본의 아니게 축소하게 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 10, 동학학회, 2005 참조.

22) 김정인에 따르면 천도교 신파는 1925년 교단 분열 이후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선농민사를 창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세력(상해파 공산당)과 협동전선을 펼치며 코민테른 산하 국제적색농민동맹(크레스틴테른)에 가입을 신청하기도 했다. 주체와 계기가 다를 뿐,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흐름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수용, 즉 문화운동에서 계급운동으로 지향점을 변경했던 『개벽』의 "방향전환"[23]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사안에서부터 시선이 갈릴 수 있다. 실제로 천도교단이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일시적으로 선택한 '임시방편'이라는 논의가 있는 반면, 치열한 담론 투쟁을 바탕으로 일궈낸 미디어적 방향 제시로 바라보는 논의도 존재한다. 이 글은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24] 『개벽』을 '개방성'을 바탕으로 건설된 여론의 '아고라' 혹은 사상 · 담론의 각축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야말로 『개벽』의 미디어성을 담보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디어의 상대적 자율성이란 '시야' 위에서 『개벽』이 신간회의 결성에 끼친 영향을 복기하는 이 글은 크게 세 국면으로 전개된다. 우선 『개벽』이 60호에서 '민족협동전선'을 대중 앞에 발하하는 국면을 주목했다.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모색되고 유포되었던 '민족협동전선론'이 대중 미디어를 통해 공공연히 선전되는 국면 전환의 의미와 내포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둘째는 대중운동론으로서 '민족협동전선론'이 조선사회에 일으켰을 파장을 어림하되, 그 파장의 민족심리적 기저와 거기에 잇댄 『개벽』의 위상과 존재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개벽』의 정간과 폐간 과정을 재음미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이 민족협동전선의 현실화에 대한 제국의 恐怖에서 비롯된 조처였고, 역설적으로 『개벽』의 민족협동전선론의 파급력을 입증하고 있음을 조망하려 하였다.[25]

---

23) 1923년(31호)~25년(55호)에 걸쳐 일어난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 및 담론 변화를 가리킨다. 김정인, 앞의 논문, 171면; 최수일, 앞의 책, 479면 참조.

24) 『개벽』의 역사를 찬찬히 되새김할 때, 또 『개벽』의 지명도와 위상 그에 따르는 여론의 감시 등을 고려할 때, 『개벽』의 방향전환을 마지못한 '임시방편'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신파이자 『개벽』의 핵심논자인 이돈화와 김기전이 방향전환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차용하고 수용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좀더 적극적인 해석이 자연스럽다. 요컨대 『개벽』의 방향전환과 '민족협동전선론'의 출범은 시대와 역사를 관류하여 도달한 미디어적 지평이자 『개벽』이라는 미디어가 시대 속에 던진 일종의 '화두'였다.

25) 온라인 발표회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었다. 특히 토론을 맡아주신 김영진 선생님의 조언은 필자가 돌아봐야 할 지점들을 예리하게 짚어주었다. 기기 조작 미숙으로 제때 하지 못한 감사의 인사를 지금 드린다.

Ⅱ. 『개벽』 60호, 발화의 성격과 의미 맥락

1925년 6월, 『개벽』 60호에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금후의 조선사회운동」라는 설문 · 회답(回答) 기사가 실리는데, 이균영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925년 6월호 『개벽』지에 실린 다음의 설문과 그 회답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설문은 ① 조선사회운동의 추세는 어떻게 될까, ② 사회운동의 금후 방침은 무엇인가, ③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금후 관계 여하 등 3항이었다. 이에 대한 회답자는 조선노농총동맹의 권오설(權五卨), 청총의 이영(李英),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의 조봉암, 서울청년회의 이정윤(李廷允), 화요회(火曜會)의 김찬, 사회주의동맹의 김해광(金解光, 金思國의 異名), 북풍회의 신철(辛鐵), 동아일보의 송진우(宋鎭禹), 변호사 이인(李仁), 시대일보의 홍명희(洪命熹), 서울청년회의 송봉우(宋奉禹), 조선일보의 신일용(辛日鎔)으로 3개 신문사의 간부 및 영향력 있는 사회주의단체의 대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이들의 설문에 대한 회답은 다소 뉘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12명[26] 전원이 금후의 민족, 사회주의자들이 협동전선을 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족, 사회주의자들이 파벌을 초월하여 공개적으로 민족협동전선을 인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치안유지법 실시는 합법적 기관으로 비타협적 협동전선이 모색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27]

'최초의 민족협동전선론'이라는 평가는 앞에 '공개적으로'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논란거리가 된다.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 창립총회를 계기로 천도교 간부인 이종린과 좌파 지도자 강영달 사이에 비슷한 논의가 오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28] 1922년의 '문화운동'이 상해파 공산당의 민족통일전선 정책의 소산이라는 주장,[29] 나아가 1919년 말엽 상해임시정부의 통합이 상해파 공산당의 민족통일전선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연구 결과[30]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

26) 원문에는 13명으로 돼 있으나, 이는 숫자 헤아림의 착오이다. 실제 설문 참여자는 12명이 맞다.

27)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43면(강조는 인용자).

28)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123면 참조.

29) 이애숙, 「1922~1924년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와 현실』 28, 1998, 93~99면; 임경석, 앞의 글, 381면 재인용.

‘최초’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균영의 평가는 여전히 유의미한 구석이 있다. 당대 최대의 잡지 『개벽』과 ‘민족협동전선론’의 공개적으로 결합되는 국면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즉, 주로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기획되고 추진되던 민족협동전선론이 미디어를 통해 대중 앞에 선전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파장과 파급력을 띠게 됐음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대중적 확산의 여건이 무르익었다. 당대 조선인에게 사회주의란 더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고, 1922~23년을 경계로 사회주의는 변혁운동의 우위를 움켜쥐고 있었다. 문화운동의 퇴조와 사회주의운동의 급성장 속에서 각종 사회주의 운동 단체와 조직이 꾸려졌고, 마침내 조선공산당이 결성(1925.4.17)되었으니, 1925년은 사회주의의 열풍 속에서 조선사회가 사실상 ‘방향전환’을 확고히 한 시기였다. 사학자인 이균영이 이런 역사적 맥락과 추이를 읽어내지 못했을 리 없다.

또 확산의 계기성도 충분했다. 밑줄 그은 ‘치안유지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1925년 5월 8일에 공표되고 12일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대륙침략을 위한 조선사회의 재편이라는 목적을 바탕에 깔고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사회주의세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다.[31] 보안법-제령7조-치안유지법으로 이어지는 이중삼중의 억압 기제 앞에서 변혁세력은 좌우를 떠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니 그 대안적 모색이 절실했던 국면이었다. 주체의 역량과 객관적 정세의 추이상, 민족협동전선론의 공개적 천명, 즉 대중운동론으로의 전환이 민족적 차원에서 충분히 상상될 만한 것이었기에,[32] 후대의 연구자도 그 전환의 의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최초’라는 표현에 실었다고 보는 것이 전후 맥락상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1925년 중반에 일어난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운동 담론으로의 전환, 비합법 세계에 머물던 민족협동전선론이 미디어를 통해 공공연히 대중 앞에 선전되었을 때, 그것이 일으킨 파장과 파급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히

30)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447~461면 참조.

31) 치안유지법의 제정과 변천 그리고 적용 사례 등에 대해서는 김철수 · 한남제의 「1920년대 ‘치안유지법’의 제정 · 적용과 식민지 지배」(『평화연구』 29,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1995)와 장신의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과 치안유지법」(『학림』 19, 연세대 사학연구회, 1998) 등을 참조할 것.

32) 오해하면 안 된다. 필자는 이 전환의 성공 여부나 전략 · 전술적 정합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 주체의 역량과 정세의 추이가 대중운동 담론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했다는 것과 그것의 전략 · 전술적 성패와 정합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범민족적인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런 어림 추측은 '민족협동전선'이 '민족의 염원'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민족해방'을 목표로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파벌'을 넘어서 힘을 합친다는 '민족협동전선론'은 양대 운동 세력의 정세분석에서 도출된 현실 타개책이었음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지식계급 전체 나아가 조선 민족 전체의 '염원'이기도 하였다. 일찍이 이돈화가 『개벽』의 방향전환 국면에서 언급한 '獨立心의 變態性'이 '민족협동전선론'의 전파와 확산의 정서적 토대였다는 것이다.

> 玆에 한가지 注意할 일은 朝鮮사람에게 가장 쉽게 이 社會主義的 氣分이 돌게 된 것는(은-인용자) 唯一의 原因이 어대 잇나냐하면 獨立心의 變態性이라 할 만한 卽 朝鮮獨立의 希望에서 失望된 元氣를 새로히 社會主義上에 變態的으로 그 希望을 펴게 된 것이라. 그들의 中에는 當初부터 主義的, 眞理的 精神으로 社會主義를 主唱하는 사람이 업지 안이할 것이나 그러나 一般 民衆으로서의 大部分은 大槪가 獨立的 希望의 變態心으로,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失望의 餘氣를 스스로 社會主義的 新理想에 붓치게 된 것이라. 그리하야 그들은 이 新希望에 依하야 다시 元氣를 펴고저 함이 最近 朝鮮에 가장 顯著한 新傾向이라 할 수 잇다.[33]

그리고 이것이 신간회의 결성을 이끌어낸 '보이지 않는 힘'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민족감정의 뇌관에 불을 댕긴 주체가 『개벽』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민족협동전선론에 잇대어 『개벽』이 호명된다는 것은 곧바로 민족운동과 여론의 차원에서 『개벽』이 차지했던 위상과 존재감이 같이 소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벽』이 어떤 잡지였던가. 국민 대다수가 문맹인 상황에서 수만의 고정 독자를 거느린 1920년대 잡지계의 麒麟兒이자 일제강점기 최고의 대중 讀物이었다.

---

33) 이돈화, 「격변 우 격변하는 최근의 조선인심」, 『개벽』 37호, 1923.7.1, 7~8면 참조. 목차에는 사회주의자 '성태'(이성태)의 글로 제시되었지만, 이는 명백한 오식이다. 글의 서두에 필자가 삼년 전에 썼다는 글은 13호(1921.7.1)의 「혼돈으로부터 통일에」로, 이는 이돈화의 글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 『개벽』의 실제 판매부수가 7000부가량이고, 잡지를 신청하고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읽고는 싶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빌려 읽거나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돌려 읽어야 했던[34] 사람들을 감안하면 『개벽』의 잠정 독자수는 수만 명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국민의 90% 이상이 문맹이었고, 그나마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자 수가 십만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은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35]

박영희의 회고에 따르면 청년들이 외출할 때 단장 들듯이 습관적으로 옆구리에 끼고 다닐 정도로[36] 『개벽』은 청년층의 필수품이었고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 이런 인기와 지명도 그리고 그에 동반한 수만의 독자는 『개벽』이 시대의 '여론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37]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 더구나 『개벽』은 일찍부터 탄탄한 전국적 유통망(52지사-62분사)을 건설하여 담론적 소통과 확산을 밑받침하고 있었고[38], 천도교 조직과 100만 명[39] 이상의 천도교 신자들이 그 외연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 『개벽』이 공공연히 '민족협동전선'을 선언한다. 그 파장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개벽』이라고 해서 모든 기사가 항상 여론의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개벽』 23호(1922.5)에 게재된 춘원의 「민족개조론」은 각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분노한 청년들에 의해 개벽사 사무실이 뒤집어지기도 했으니[40]

---

34) 輪讀과 回覽은 식민지시대 하나의 보편적 독법이기도 했다. 물론 그 중심에는 1920년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청년단체들이 있었다. 『개벽』 11호에 실린 「잡지 『서광』을 읽고 황석우군에게」는 흥양청년회의 대표 27명의 이름이 연판된 일종의 '집단논평'으로 '돌려읽기'의 유행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벽』 연구』에서는 '314명의 이름이 고스란히 적힌'이라 했지만 실제는 대표 27인의 이름만 새겨져 있다. 바로잡는다.

35)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316-317면.

36) 박영희, 「신흥문학의 대두와 개벽시대의 회고」, 『조광』 32호, 1938.6, 54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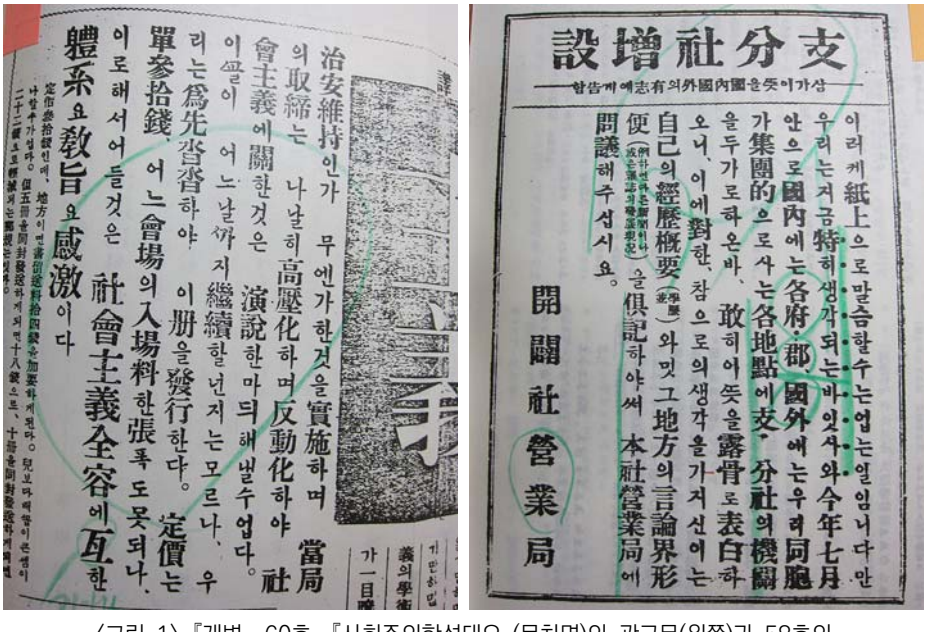
37) 임경석, 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 사람들, 2007, 7면 참조.

38) 『개벽』 유통망의 현황과 담당층에 대해서는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 2008, 3장을 참조할 것.

39) 1920~1930년대 천도교도의 수가 불교와 기독교를 능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구체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1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의견이 갈린다. 이 글은 천도교청년당 간부였던 이척(李拓)이 제시한 100만 명이 그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척, 「사이비운동이론의 비판」, 『신인간』, 1933.1; 김정인, 앞의 논문, 219면 재인용.

40) 이광수, 「最近十年間 筆禍, 舌禍史」, 『삼천리』 14호, 1931.4.1, 14~15면; 이광수(魯亞子) 외, 「『개

『개벽』 편집진은 어쩔 수 없이 다음호에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41] 『개벽』이 미디어인 이상, 여론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고, 여론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담론의 영향력이 최종 조율되었다는 생생한 방증이다. 따라서 담론의 내포가 중요했다. 즉, 무엇을 담아내는가 하는 문제가 본원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앞 장에서 보았듯 『개벽』 60호의 발화는 당대 지식계와 언론계의 화두였던 '치안유지법의 실시'라는 국면을 정확히 겨냥점으로 삼고 있었다. 더구나 『개벽』에서 확인되는 일련의 기사들, 즉 「재래할 삼중 악법령」(58호), 60호의 권두언 「국궁진췌이기」는 『개벽』 60호의 발화(「치안유지법의 실시와 금후의 조선사회운동」)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기사만이랴. 『개벽』은 광고와 사고에까지 '치안유지법'을 운운하거나 그 존재를 배면에 암시하기도 했으니, 민족협동전선론의 천명을 우연한 일로 돌리기 어려웠다.


治安維持인가 무엔가한것을實施하며 當局
의取締는 나날히高壓化하며反動化하야 社
會主義에關한것은 演說한마듸해낼수업다。
이글이 어느날까지繼續할넌지는모르나、우
리는爲先沓沓하야 이册을發行한다。定價는
單參拾錢、어느會場의入場料한張폭도못되나、
이로해서어들것은 社會主義全容에互한
體系요敎旨요感激이다

支分社增設
—삼가아뢰옵는 國內國外의有志께 告함—
이러케紙上으로말슴할수는업는일임니다만
우리는지금特히생각되는바잇서와今年七月
안으로國內에는各府·郡國外에는우리同胞
가集團的으로사는各地點에支·分社의機關
을두가로하온바、敢히아뜻을露骨로表白하
오니、이에對한、참으로의생각을가지신이는
自己의經歷槪要(學歷並)와밋그地方의言論界形
便(例하면朝鮮日報·東亞日報·中外日報·朝鮮·東亞·中外·每日·時事·每日·朝鮮·東亞·中外·每日·時事·每日·朝鮮·東亞·中外·每日·時事·每日

이런 저간의 상황을 종합하면 『개벽』 편집진이 '치안유지법의 실시'가 몰고 올 파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문 기사를 기획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래의 제령7조는 민족운동자를 눌러왔고 금반의 치안유지법은 사회운동자를 막 누르게 될 것인즉 가튼 압박을 밧는 처지에 잇서서 양운동자는 접근하게 될 일치점이 만흐리라"[42]는 답변자들의 판단은 「재래할 삼중 악법령」(58호), 60호의 권두언 「국궁진췌이기」로 이어지는 『개벽』의 정세판단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개벽』은 이미 '치안유지법의 실시'를 겨냥하여 '민족협동전선'이라는 대응 전략을 모색해왔고,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금후의 조선사회운동」(60호)은 그것의 대사회적 공표이자 여론의 확인 과정이었으니, 이런 여론 정합성과 선도성은 사안에 대한 『개벽』의 파급력을 더더욱 증폭하는 요인이 되었다.

아쉬운 점은 『개벽』이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신에 끼친 영향력과 파장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자장 안에서 『개벽』의 영향력만을 따로 추려내는 일은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다. 일제의 대응과 반응을 복기하는 것이다. '신간회'에 대한 일제의 지속적 탄압과 방해가 신간회 결성의 파급력을 방증하는 것처럼, 이 시기 『개벽』에 대한 탄압이 『개벽』이 발화한 '민족협동전선론'의 파급력을 방증하는 조처였으리라는 이야기다.

Ⅲ. 민족협동전선론의 확산과 그 반향: 『개벽』의 정간과 폐간

이 지점에서 『개벽』 62호(1925.8)에서 비롯된 2개월(1925.9~10)의 정간과 『개벽』의 강제폐간은 새롭게 복기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벽』 62호는 발행 직후 발매금지를 당해, 그 호외까지 압수되었으며 이는 2개월간의 발행정지로 이어졌다. 아울러 "異域風霜에 鞠躬盡瘁하는 國士! 志士!"라는 제목의 광고문이 문제되어 8월 1일자 『동아일보』(조간)도 발매금지(압수)를 당했다.

---

42)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금후의 조선사회운동」, 『개벽』 60호, 1925.6, 11면.

〈그림 2〉 압수된 『개벽』 62호의 광고문(왼쪽)과 총독 명의의 발행정지 명령서[43]

"우리는 마치 그 기사를 농촌의 농민들이 그 고향에서 살던 친구들의 소식을 소담(消談)으로 하는 듯이 한 것인데 당국자는 그렇게까지 중대시한 것 같습니다."[44]라는 박달성의 관련 언급과 광고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민족인사들을 돌아가며 소개하고 그 안부를 확인한 「밖에 있는 이 생각」이란 기사가 압수와 정간의 직접적인 이유였다. 그런데 정말 이 기사만이 문제였는지 의심스럽다.

『개벽』 62호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 「밖에 있는 이 생각」은 이돈화의 「재외동포에게」에 잇대어진 일종의 '콜라보 기사'였다. 더구나 「재외동포에게」는 '특히 지도자되는 여러 선배에게'라는 부제까지 달고 있었으니, 「밖에 있는 이 생각」의 기획 인사말 같은 기사였다. 그 내용 또한 맥락이 이어졌다. 조선의 사상 형편이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무게중심을 옮겼고, 최근에 와서는 양대 진영의 상호 양해와 협력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바, 재외동포도 주의가 다르고 경우가 어떠하든지 "재외동포통일"

43) 신인섭 · 서범석, 『한국광고사』(개정판), 나남출판, 2005, 153면 재인용.

44) 「언론취체는 여차-개벽지에 발행정지」, 『동아일보』, 1925.8.2, 조간 2면 참조.

의 운동을 일으켜 달라는 것이다.

> …… 우리는 在內同胞가 在外同胞를 잊고 일할 수 업고 在外同胞가 또한 在內同胞를 버리고 勝利할 수 업는 것이니까 內外가 合하야 內에서 못하는 일을 外에서 하고 外에서 못하는 일을 內에서 하야 彼此 協同共進하지 안이하면 안될 줄로 압니다. …… 民族運動者와 社會運動者와의 意見이 多少 相違가 날것은 事實입니다. …… 그래서 兩者가 暗暗裡에 서로 爭鬪도 업지 안이 하엿스나, 最近에 와서는 朝鮮사람의 特有한 形便과 境遇에 쌀라 兩者의 넓은 諒解가 成立되야 너의 主張이 어느 程度까지 나의 主張과 反對되는 것은 아니라 하게 되엿습니다. …… 主義야 다르든지 境遇야 엇더튼지 어느 程度까지 合致點이 發見되지 안이할 理가 잇겟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좀 在外同胞統一의 機運을 지어 봄이 엇더합니까.[45]

요컨대 두 기사는 '민족협동전선론'의 해외판 버전으로, 좌우협력을 거족적 차원의 통일운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기획을 담고 있었다. 기사 자체도 문제였으나 그 맥락과 연속성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제가 단발적인 발매금지에 그치지 않고 무기한 발행정지를 결정한 데에는 이런 일련의 기사들이 몰고 올 파급력을 저어한 까닭이고 또 그 주체가 『개벽』이었기에 더더욱 긴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행정지 직후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고등경찰과장이 『개벽』에 새겨진 불온의 역사성과 1925년 들어 더 분명해진 '타협의 여지없어짐'을 거론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 『개벽』잡지가 발행뎡지를 당함에 대하야 전중(田中) 고등과장은 말하되 "『개벽』잡지에 발행뎡지까지 하게 된 것은 팔월 호에 관련한 것뿐 아니라 원래 『개벽』잡지로 말하면 종교잡지로 출현되엿스나 점차 정치를 언론하게 되야 론조가 항상 불온함으로 주의도 여러 번 식히고 발매금지도 여러번 식혓스며 금년에 일으러서는 그 불온한 뎡도가 너무 심한 고로 곳 발행뎡지를 식히랴고까지 하엿스나 삼월 달에 특히 개벽사 책임자에게 엄중히 주의하고 다시 그의 태도를 살펴오던 중 그 이후에도 겨우 한번만 무사하고 기타는 다달히 발매금지를 아니할 수 업게 되엿다. 금번 팔월 호로 말하면 만일 금번만 가트면 발매금지에 그치고 말엇슬는지도 알 수 업스나 아모리 하여도 그대로 가서는 고칠 희

45) 이돈화, 「재외동포에게-특히 지도자되는 여러 선배에게」, 『개벽』 62호, 1925.8.1, 4~9면 참조.

망이 업슴으로 단연 금지 식힌 것이다."[46]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와 파장은 다르다. "6년간 40회 이상의 압수와 벌금 1회, 정간 1회"[47]라는 숫자가 함축하는 『개벽』의 불온성은 조선인들에게는 『개벽』의 역사에 돋을새김된 '믿음직함'이었고, 『개벽』의 방향전환이란 그 자체가 민족협동전선의 內在化였으니,[48] 그런 『개벽』이 '민족협동전선론'을 공공연히 선전한다는 것은 일제로서는 경악할 만한 상황이었다. 일제가 가장 우려한 것은 '민족협동전선론'의 현실화, 즉 조직화였을 것이고 그 중심에 『개벽』으로 대표되는 언론기관 개벽사와 천도교세력이 자리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926년, '민족협동전선론'이 그 현실정합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인정 ·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49] '6 · 10만세운동'[50]이 일어났던 것이다.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난 이 운동은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사회주의운동 세력의 주도로 기획되었고,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천도교측이 '협동전선'의 차원에서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그 결과 2차 공산당 사건이 일어났고, 자금과 인쇄를 담당하는 등 만세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천도교측은 천도교당과 개벽사가 급습당하고, 80여 명의 인사가 체포되는 고초를 겪었다. 요컨대 6 · 10만세운동은 천도교(구파)와 사회주의 세력과의 조직적인 연대의 결과이자 '민족협동전선론'의 현실화였으니, '그대로 가서는 고칠 희망이 없다'는 일제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었다.

결국, 『개벽』은 1926년 8월 통권 72호가 압수됨과 동시에 폐간되었다. 고등경찰과정 다나카 다케오의 최후통첩이 있은 지 정확히 1년 만의 일이었다. 사회주의자 朴春宇의 「모스크바에 새로 열린 국제농촌학원」, 필자 미상의 시평 「색다른 의분」과 「폭

---

46) 「『개벽』의 정지와 당국의 언명」, 『조선일보』, 1925.8.4.;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 대동문화연구원, 2005, 94~95면 재인용.

47) 최수일, 앞의 책, 44면 참조.

48) 본원적으로 3 · 1운동의 자장 안에서 탄생하여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개벽』이 사회주의에 문호를 개방했다는 것, 주로 천도교 신파였던 『개벽』의 편집진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사상을 수렴했다는 것은 민족협동전선의 미디어적 실현이자 집단적 자기화이다.

49) 전상숙,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4, 201~202면 참조.

50) 6 · 10만세운동 전반에 대해서는 장석흥, 「6 · 10만세운동 연구」(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5)와 김인덕, 「6 · 10만세운동의 매개가 된 순종의 죽음」(『역사비평』 1, 역사문제연구소, 1992) 참조.

력단 상애회의 망동」, 이호의 「행동의 시」 등 '과격한 혁명사상에 관한 기사를 만재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으나, 이 또한 본원적으로는 '민족협동전선'과 무관한 사안이 아니었다. 본명 朴鎭順, 『개벽』 후반기 여러 편의 글을 게재한 박춘우는 상해파 공산당의 지도자였고[51], 이미 조선농민사를 중심으로 상해파 공산당과 천도교(신파)의 통일전선이 구축되고 있었으니,[52] 박춘우와 『개벽』의 잦은 조우는 신파가 기획한 통일전선의 『개벽』으로의 확산으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총독부 핵심 권력자의 판단을 『개벽』 72호에 국한된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개벽』(사)의 불온한 역사와 '민족협동전선론'의 발화 (60호) 그리고 천도교 신구파의 행보(조선농민사의 활동과 6 · 10만세운동)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 텬도교(天道敎) 긔관잡지로서 처음에는 학술 종교에 관한 긔사를 게재함으로써 목뎍을 삼는다 하야 보증금도 밧치지 아니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창간 당초부터 정치, 시사 문제 등 제한 외에 관한 긔사를 써서 차압이 빈번하엿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 십일 년에 니르러 정치 경제 일반에 대한 긔사 게재를 허락하엿스나 론조는 의연 불온하야 당국으로부터 경고와 설유바든 일이 일이차가 아니외다. 이리하야 칠십이회 발행 중 삼십이회가 압수를 당하엿고, 금 팔월 호에는 과격한 혁명사상 선전에 관한 긔사를 만재하엿슴으로 경무국장, 정무통감, 총독부와 상의하여 단연한 처치를 한 것이외다.[53]

『개벽』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문화정치의 상징물과 같은 존재였던 바, 『개벽』의 폐간은 문화정치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는 『개벽』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검열체계의 임계를 돌파했음을 말해준다. 최후통첩에서 폐간까지 1년간의 아슬아슬한 임계상황에서 마지막 돌을 얹은 것은 '國民黨'사건[54]과 6 · 10만세

---

51) 강만길 · 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209~210면 참조.

52)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잇대어 타협적 면면을 드러내기도 했던 '신파'의 지도부가 조선농민사를 통해 코민테른과 일종의 협동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여론의 대세가 민족협동전선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신파의 구체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3장 2절을 참조할 것.

53) 「항상 불온기사 혁명사상 선전」, 『동아일보』, 1926.8.3.

54) 1926년 초반, 조선공산당의 계획 아래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통일 · 연락기관으로 국민

운동, 그리고 조선농민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천도교 신파의 통일전선운동이었으니, 이는 일제의 눈에 '민족협동전선론'의 구체적 실천이자 현실화로 비춰졌다.[55] 결국 『개벽』은 폐간되었지만,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으니, 『개벽』을 신간회의 미디어적 前史로 바라보려는 이 글의 취지가 과장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Ⅳ. 남은 문제와 그 실마리

『개벽』이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산에 끼친 영향력을 복기함으로써 『개벽』을 신간회 결성의 미디어적 전사로 자리매김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이 글은 '민족협동전선론'이 『개벽』을 필두로 한 대중미디어를 통해 대중운동론으로, 또 대중-여론으로 전화되고 확산되는 국면을 주목했다. 여론으로서의 '민족협동전선론'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개벽』과 신간회를 연관짓는 도구적 장치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로 신간회와 관련한 몇몇 의문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령, 신간회 결성 이후 지회 건설(140여 개)과 회원수 증가(약 4만 명)의 속도와 폭발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당대 그런 속도와 폭발력을 추동할 만한 단일조직체가 드물었기[56]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그것이 위(중앙)로부터의 조직운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아래(지방)로부터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움직

당(國民黨)을 창립"하려 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계획상 국민당 본부는 안전한 만주에 두고 국내 지부를 천도교 안에 두려고 했으나(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7, 48면), 천도교 신파의 우두머리 "최린이 천도교를 타협적 민족운동기관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다는 견해에 따라 양파 합동의 구체적 실천은 유보되었다."(이균영, 앞의 책, 81면 참조).

55) 물론, 『개벽』의 폐간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전환이라는 국면전환의 산물이다. 즉, 일제의 팽창정책(군사적 대륙침략 정책)에 따라 조선에서 문화정치의 유효성이 종식되었고, 『개벽』의 폐간은 그런 역사적 문맥 속에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 대동문화연구원, 2005, 참조.

56)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조직운동의 계보가 실제하고, 한편으로는 천도교단이 전국적 규모로 지회건설에 참여했음은 분명하지만,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든, 혹은 양쪽의 합산으로든, 그것만으로 그런 속도와 폭발력이 설명되지 않는다. 『개벽』과 『조선일보』·『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힘과 역할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임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형편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추동한 힘의 원천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의 여론은 이 국면에 조직운동의 너머와 저변을 살필 수 있는 여지와 시선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강령 차원에서[57] 배제될 처지에 놓였던 자들의 귀환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민족주의 우파의 우두머리로 꼽히는 송진우의 신간회 참여, 수양동우회 계열의 기독교들의 평양지회 설립, 그리고 천도교 신파가 주도한 7개 지회의 설립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고 할 때, '비타협성'이라는 계기성을 부정하지 않고도 그들의 참여를 의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 즉 부정할 수 없는 대세로서의 '민족협동전선론'에 의거해 현실태로서의 '신간회'의 견인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가능성의 언급일 뿐이니, 불완전한 것이요 또 그 자체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의 한계가 어디 그뿐일까. 신간회의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이란 담론의 차원과 조직구성의 차원 모두를 포괄하는 사안이지만, 실제 글은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전파와 확산 차원에 머물러야 했다. 문제제기의 장에서 『개벽』의 유통 관련 인물들의 상당수가 신간회 지방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했고, 또 개인적으로 '개벽사 확장기성회'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개벽』과 신간회를 人的으로 연관지으려면 갈 길이 멀다. 인적 비교 · 대조에 꼭 필요한 독자적인 신간회 회원 명부조차 마련되지 못한 형편이니, 상호 영향 관계를 운운하는 것이 민망한 형국이다. 민족협동전선론의 대중적 확산을 말하면서 대중적 파급력이 컸던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을 거론하지 못한 것도 한계다.[58] 모두 공부와 고민이 부족한 결과이니,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실마리 제시 정도로 혜량해 주기 바란다.

---

57)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강령을 가리킨다. 『동아일보』, 1927.1.20.; 이균영, 앞의 책, 98면 재인용.

58) 『동아일보』와 '연정회'의 연관이 함축하듯, 민족협동전선에 대해 미디어에 따라 지향점과 내포에 낙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신문과 잡지라는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서도 분기점이 생겼을 것이 틀림없다. 다만, 이 글은 '좌우합작'이 여론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 내지 '흐름'으로 자리잡는 과정에 주목했기에, 미디어별(미디어 내 세력 간) 낙차와 변별에 주목하지 못했다. 신문과 잡지, 비합법미디어를 포괄하여 섬세한 변별과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여러 선생님들의 합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글로 받아 안기 어려웠던 이유이다.

결국 ‘『개벽』은 무엇인가’에 답하는 것이 ‘『개벽』 100주년 기념 특집’이란 기획의 취지이자 목표일 것이고, 이는 필자가 『개벽』 연구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기도 했다. 돌고 돌아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섰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개벽』 연구』에서 크게 나아간 바가 없다. 다만, 아주 소소한 실마리를 몇 가지 얻었을 뿐이다. 이는 『개벽』이라는 ‘존재했던 것’의 흔적이다. 이 흔적을 잘 추적해서 앞의 물음에 본원적인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질책과 조언을 바란다.

투고일: 2021.01.28 심사일: 2021.03.13 게재확정일: 2021.03.19

참고문헌

『개벽』『천도교회월보』『신인간』
『동아일보』『조선일보』『시대일보』
박영희, 「신흥문학의 대두와 개벽시대의 회고」, 『조광』 32호, 1938.6
이광수 외, 「『개벽』시대를 추억하며」, 『별건곤』 30호, 1930.7.
이광수, 「最近十年間 筆禍, 舌禍史」, 『삼천리』 14호, 1931.4.1
이척, 「사이비운동이론의 비판」, 『신인간』, 1933.1

강만길 · 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7
신인섭 · 서범석, 『한국광고사』(개정판), 나남출판, 2005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임경석, 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전상숙,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4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김영진,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 『향토서울』 78, 서울역사편찬원, 2011
김인덕, 「6 · 10만세운동의 매개가 된 순종의 죽음」, 『역사비평』 1, 역사문제연구소, 1992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김철수 · 한남제, 「1920년대 '치안유지법'의 제정 · 적용과 식민지 지배」, 『평화연구』 29,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1995
박용규, 「1920년대 중반(1924~1927)의 신문과 민족운동-민족주의 좌파의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4),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 10, 동학학회, 2005
_____, 「일제강점기 천도교청년당의 대중화운동」, 『한국독립운동사』 30,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8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윤효정, 「신간회의 창립 과정 연구-조선공산당 활동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_____, 「조선일보의 중국 국공합작 지지 담론과 신간회 창립 지원」, 『역사연구』 34, 역사학연

구소, 2018
이애숙, 「1922~1924년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임경석, 「식민지시대 민족통일전선운동사 연구의 궤적-이균영의 『신간회 연구』(역사비평사, 1993)에 대한 비평」, 『한국사연구』 149, 한국사연구회, 2010
장석흥, 「6 · 10만세운동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5
장승순, 「충북지역 신간회 괴산지회 활동의 성격」, 『중원문화연구』 22,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4
장 신,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과 치안유지법」, 『학림』 19, 연세대 사학연구회, 1998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 대동문화연구원, 2005
한상구, 「1926~1928년 민족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연구』 86, 한국사연구회, 1994
_____, 「1926~1928년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론』 32, 서울대 국사학과, 1994

The influence of 『Gaebyeok』 on organizing Singanhoe — Focusing on the popular spread and propagation of the national cooperation front theory

Choi, Su-i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isualize the influence of 『Gaebyeok』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Singanhoe, Japanese colonial era's largest anti-Japanese public association. Specifically, it deduced the contribution of the media 『Gaebyeok』 in terms of popular spread and propagation of the national cooperation front theory, which was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Singanhoe. And it tried to make 『Gaebyeok』 meaningful as its role model in terms of the previous history of the national cooperation front(Singanhoe) and also tried to find ways to follow the traces of 『Gaebyeok』 imprinted on the Singanhoe in terms of a way of organizing the association.

For this, the popular declaration of the national cooperation front theory(June 1925), the discontinuance of 『Gaebyeok』(August 1925), and the formation of Singanhoe (February 1927)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relevance.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mediality of 『Gaebyeok』, it tried to put on a public opinion-media costume in the continuous process. This was caused by the purpose of supplementing the bias of the organizational movement centered on the existing 'Shinganhoe research', and examining the media autonomy of 『Gaebyeok』, which was not examined by '『Gaebyeok』 study' or 'Cheondogyo study'.

The influence of 『Gaebyeok』 on the formation of Shinganhoe is a matter that encompasses both the dimension of discours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but in this paper,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former dimension of the popular spread and propagation of the national cooperative front theory.

However, by stating that many of the distribution-related persons in 『Gaebyeok』 were local members of Singanhoe, and by securing a list of about 300 members of 'Gaebyeoksa

(publishing company) Expansion Foundation', it left clues as to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Key Words : 『Gaebyeok』, Singanhoe, National Cooperation Front Theory, Cheondogyo, the new group of Cheondogyo, the old group of Cheondogyo, socialism, nationalism, left-right alliance, mass movement, mass organization, legal organization,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the autonomy of media